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패, 실질적 특례에 달렸다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중앙부처 소극태도 유감
특별법 핵심특례 부처 검토서 빠져…전향적 수용 촉구
공동결의문 발표…정부·국회 설득 등 공동대응 강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에서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담긴 권한 이양과 관련해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전남 무안군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갖고, 최근 중앙부처가 특별법에 포함된 주요 특례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다수 제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당론으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특례 조항이 담겼다.

특례 조항에는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검토 과정에서 특별법 특례 374개 중 핵심 특례 119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집적 단지 지정, 에너지 미래 도시 조성, 해상풍력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등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농·수산 분야 등 각종 인허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취지의 특례 대다수가 정부 반대에 직면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산업,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지역 미래가 걸린 첨단 전략 산업 특례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기업 유치와 직결되는 핵심 특례 사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통합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45개 특례 조문에 대해서는 정부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결단한 재정 분권은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방식 등이 입법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한다"면서 "시도 간 의석 수가 3배 차이 나는 원 구성에 있어서도 전남 편중 현실화를 막기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특정 지역이 과반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특별법안 특례 일부가 정부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있어 큰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있다. 대통령이 줄곧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 또는 국가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중앙 부처들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불수용 이유를 보면 통합 특별시에 해줄 게 없는 것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인센티브 역시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한 이후부터 항구적인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 해마다 3조 정도는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만큼은 관철해야 한다"면서 "정부와의 논의 구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국무조정실장 중심으로 각 부처와 시·도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부남 시당위원장과 김원이 도당위원장도 각각 "대통령의 뜻과는 약간 괴리가 있는 정부 권한 이양에 대해 소극적인 점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감출 수 없다", "부처 이기주의를 고집하면 '특별시가 되면 우리 삶이 나아지느냐'고 묻는 지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문화산업과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인재양성 분야는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정부부처 설득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해당 특례가 광주전남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이 발표됐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인 광주·전남의 성공을 담보할 기틀이자, 지방주도 성장으로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법안이다"며 "이러한 시대적 소명이 오롯이 새겨진 특별법안이, 지금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통합의 목적은 과감한 재정과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여는 것"이라며 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 수용, 항구적 재정 지원체계 명문화,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에 걸맞은 재정, 권한특례 특별법 명시 등을 요구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정부 부처와 국회 설득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필수적인 핵심 특례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교통·생활·양육비까지…광주 '설 선물' 민생패키지 풀가동

최대 20% 환급 상생체크카드·출생축하카드 등 바로 체감
청년 구직활동 수당·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인기

광주시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설 선물 같은 정책'을 풀가동 한다.

광주상생카드 할인 혜택을 비롯해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지(G)-패스,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광주청년 구직활동수당,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시민들이 바로 챙기면 좋은 알찬 정책들이다.

광주시는 현재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광주상생카드(체크·선불)를 구매하거나 충전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상시 할인(캐시백)해 주고 있다.

여기에 오는 28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인근 가맹점에서 상생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후캐시백으로 추가 제공한다. 기본할인 10%에 추가 10%가 더해져 최대 20%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G-패스'는 어린이 무임, 청소년 반값 혜택에 더해 성인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카드'와 연계한 통합 환급체계를 운영한다. 이용 시민은 두 제도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돼 별도 선택 없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5세부터 39세 시민도 '청년'으로 포함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광주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인당 50만원이 충전된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광주에서 출생한 아동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첫째아는 출생 직후부터, 둘째아 이상은 1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부모 등 출생신고 신청권자로,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기존보다 1세 확대해 9세 미만까지 지원하고, 월 지급액도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기존 1만590원에서 1만1120원으로 오른다.

청년정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19세부터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광주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취업 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을 돕는 청년정책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수당과 함께 다양한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사업 기간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에게는 취업성공수당 50만원도 지급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을 0.5%로 낮춘다.

아울러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도 제공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도, 수시인사 단행…자치행정국장에 강종철

통합 지방정부 출범 준비…박종필 인재육성교육국장 전보

전남도는 9일자로 자치행정국장에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을 전보하는 등 국장급(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관련인사 18면

강종철 국장

박종필 국장

이번 인사는 파견 및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전보 성격을 담고 있다. 인사 규모는 국장급(3급·부이사관) 4명, 과장급(4급·서기관) 2명, 팀장급(5급·사무관) 8명, 6급 이하 14명 등 총 28명이다.

승진 인사의 경우 개인별 순위, 성과 등을 두루 평가해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팀장급 3명, 6급 이하 6명 등 총 11명을 결정했다.

우선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자치행정국장, 박종필 인재개발원장은 인재육성교육국장으로 이동했다.

3급 승진의 경우 서형빈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관이 승진 후 행정안전부로 파견됐으며,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이 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정채용 동부지역본부 홍보팀장이 4급 기획홍보관으로 승진했고, 최남규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으로 직급 승진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 의총 후 입장 발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합당 관련)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와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 이후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심해지는 데다 밀약설 등 혁신당을 겨냥한 주장까지 나오자 조 대표가 잡음 해소를 위해 '합당 결정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도, 어르신 맞춤형 복지에 1조7998억 편성

전 시군서 의료·요양·복지 통합돌봄 추진

전남도는 2026년에도 어르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노인복지 예산 1조 7998억원을 편성하고 맞춤형 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9700원, 부부가구는 월 55만 952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6000여 개 늘린 7만 3000개로, 경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역량활용형 사업과 돌봄 영역 중심의 공익활동형 사업 등 어르신 특성과 수요에 맞춘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남지역 경로당 9308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년보다 20만원 증액된 연 174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한다. 어르신이 보다 편안하게 식사하도록 경로당 138개소에도 입식 테이블을 제공한다.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 생활 편의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의료·요양·복지 통합돌봄'을 비롯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무료급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대학 내달 출범

학칙 개정·조직 정비 마무리…2·4년제 학위 과정 운영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가 통합돼 오는 3월 1일 '국립목포대학교'라는 단일 명칭으로 공식 출범한다.

8일 국립목포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전남도립대와의 통합대학 출범을 위한 세부 이행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통합 이후 학칙 개정을 통한 조직 정비를 비롯해, 폐지되는 전남도립대 소속 재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권·근무권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 규정 마련 절차 등을 집중 논의했다.

통합대학은 학칙과 내부 규정을 통해 학적 관리, 교원·직원 인사, 캠퍼스 운영 등 통합 실무 전반을 명확히 규정해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대학은 3월 1일 통합대학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과 학칙 정비, 학생·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 등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통합대학 출범식은 3월 중순 국립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립목포대는 이번 통합을 통해 2년제와 4년제 학위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 고등교육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